

적은 쿼터, 짧은기간 등 한계... 현장선 사람 없어 '아우성'

외국인 인력 대전환 시급

④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제점

올해 E-9 비자 쿼터 5만9000명 생산성 떨어지는데 같은 수준 임금 고용허가제 '대수술' 목소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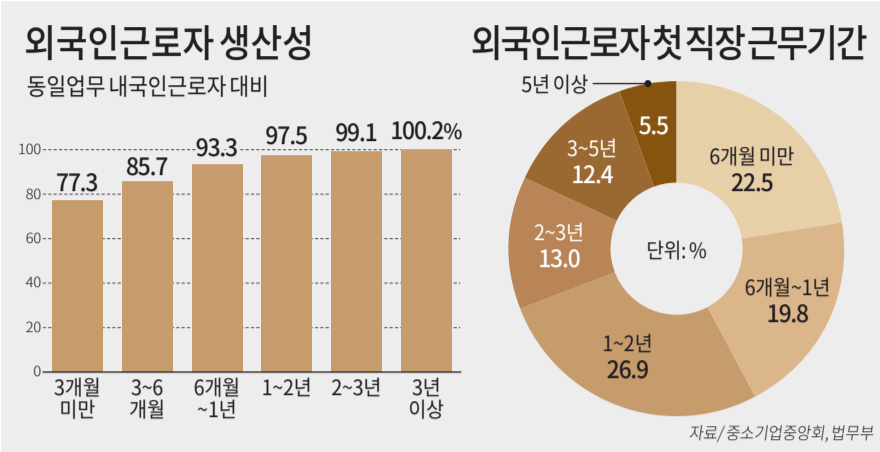
산업 현장에서선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를 놓고 도입 쿼터 부족, 짧은 체류 기간, 잦은 사업장 변경, 채용 정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매년 들어와 일하는 인원에 제한을 두는 도입 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외국인력)는 '비전문취업'으로도 불리는 E-9 비자가 총 5만9000명이다. 이는 3만5530명의 신규 입국과 2만3470명의 재입국을 더한 숫자다. 5만9000명 가운데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허용 쿼터는 4만4500명이다.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5만5000(2015년)→5만8000(2016년)→5만6000(2017년)→5만6000(2018년)→5만6000(2019년)→5만6000(2020년)→5만2000명(2021년) 등으로 매년 6만명이 넘지 않았다.

이 기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쿼터는 4만2400→4만4200→4만2300→4만2300→4만700→4만700→3만7700명으로 4만명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정부가 해마다 일정 쿼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빈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려고 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 늘 일손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2021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도 1만90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제조업 생산직의 외국인력 부족률은 55.8%에 달한다"면서 "올해 2·4분기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284명인데 제조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원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1만40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중소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특례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의 동포(방문취업·H-2 비자)도 4월 말 현재 11만5927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마저 1년전인 2021년 4월(14만2011명)보다 2만6000여 명이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동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동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어 소통이 원활하고 업종별 취업제한이 거의 없어 일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직자들의 협상력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정작 외국인력이 필요한 곳에선 쓸 사람이 없다. 월급 등 처우가 좋은 곳으로만 몰리다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하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선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다. 사업장을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들에겐 골칫거리다.

고용허가제상 기본 취업기간은 3년이다. 그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10개월을 연장해 총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재입국특례자

(옛 성실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1~3개월이 지나 다시 입국하면 4년10개월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최초 근무부터 재입국특례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9년8개월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초 3년' 또는 재고용 신청 후 최대 '4년10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언어 소통은 물론이고 일 이 손에 익는 기간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의 경우 국내에서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내국인 대비 생산성이 99.1%로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산성이 내국인의 9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민대홍 이사장은 "최초 3년간 외국인력을 숙련공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3년 정도 일하면 재고용해 최대 4년10개월 근무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이직을 해 버리면 더욱 힘들다. 떠난 외국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기도 많다.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력의 체류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에서 외국인력은 최초 입국후 3년간 3회, 1년10개월의 재고용 기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4년 10개월간 최대 5회 사업장을 바꿀 수 있

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회사에 머물며 4년10개월간 일한다면 모를까 이같은 제도 내에서 숙련공을 만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첫 회사를 한국 입국을 위한 교두보로 삼은 후 몇 개월 뒤엔 지인이나 형제·친척들이 있는 회사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법무부가 2020년 내놓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2.3%가 첫 직장에서 1년도 안돼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2.2%는 3년도 안돼 사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은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등으로 맞서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

채용 과정에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외국인력을 관계기관에 신청하면 3배수로 배정을 받아 이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고른다. 하지만 기업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가, 성별, 키, 몸무게, 본국에서의 활동 등의 정보가 대부분이다. 직원 채용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사전인터뷰는 아예 불가능하고 숙련도 역시 최종 채용에 앞서 검증할 수가 없다. 거의 '깜깜이' 상태에서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시행한지 20년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노비즈協, 특허청과 지식재산 경영 지원

전문인력 활용 현장지원체계 강화 차세대 동력 성장 위한 맞춤형 정책

이노비즈협회가 특허청과 손잡고 회원사들의 지식재산(IP)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0일 경기 평택 텔스타호텔에서 특허청과 '이노비즈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 주요 내용은 ▲이노비즈협회 전국지회특허청 지역지식센터(RIPC) 간 상호협력·지원체계 구축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 지원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및 과정 운영 ▲지식재산 정책홍보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개발 및 시행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역지식센터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



(왼쪽부터)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 특허청 이인실 청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

산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IP-R&D 및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 등 관련 사업 신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 지원사업 우대 및 지식재산공제 인증 평가료 지원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교육·설명회 개최 등 이노비즈기업이 차세대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협회는 지식재산 교육 프

로그램 과정 운영과 지식재산 콘텐츠 제작 및 협회 홍보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은 "특허청과의 이번 협력은 국내 총 GDP의 15.3%를 차지하는 등 제조혁신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이노비즈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향후 두 기관 간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특허청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수년 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시중은행, 1.4조 규모 우대보증 지원

국민·신한·우리·하나銀

기술보증기금이 주요 시중은행들과 손잡고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1조 4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회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표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와 시중은행은 서로 협업체를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초격차 유지 ▲첨단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가능성장(ESG)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침대

메타버스 '제페토' 진출

시몬스 침대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진출한다. 시몬스는 침대없는 팝업 스토어와 소

셜라이징(Socializing) 프로젝트로 이목을 집중시킨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지난 10일 제페토에 론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활동하는 제페토에서 시몬스 침대는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열풍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역대급 인플레이션' 美 식품기업들, 추가 가격인상 예고
▲ 中 제로코로나 불안감에 소비 대신 저축...전년 비 50% ↑ /사진 뉴시스



▲ 성폭력 혐의 前 엑소 크리스, 中서 체포 10개월 만에 재판
▲ EU 집행위원장 "곧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자격 부여 결정" /사진 뉴시스

▲ 러, 군국주의 교육 박차... '애국수업' 강요하고 교과서 검열
▲ 3명 사형 선고한 DPR, 한국 의용군 재판... '우크라이나 위해 싸웠다'